

제 2 장 한반도 접경지역에서 나타나는 안보-경제 연계와 영토화와 탈영토화의 지정-지경학

토로문

발제자께서 논문을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규정하신 점에 대해 매우 공감합니다.

1. 우선 논문 자체와 관련하여 발제자께서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논문의 제 2 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Andreas 의 '안보-경제 연계' 개념을 인용하면서 미국-멕시코 국경 사례를 제시하셨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멕시코 국경의 물리적 장벽 건설과 국경 통제를 강화해 왔으며, 현재 국경 장벽 건설은 2027 년까지 상당 부분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Andreas 의 '안보-경제 연계' 관점은 미-멕시코 국경을 설명하는 데 상당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경제적 논리보다 미국 국내의 안보 문제가 더욱 전면에 부각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Andreas 의 관점과 점점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국경 장벽 및 국경 통제 정책을 함께 고려할 때, 발제자께서는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2. 논문의 내용과 구성 측면에서 보면, 저자께서는 P.205 의 3.1 절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해당 장의 논의를 전개하고 계십니다. 첫째, 강원 지역지와 중앙일간지의 기사 변동 추세가 매우 유사합니다. 둘째, 기사량의 변화는 남북 간에 이슈가 발생한 시기와 연동됩니다. 셋째, 매우 불규칙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도발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넷째, 선거 시기에 기사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의 논의를 살펴보면, 첫째·둘째·셋째 항목은 구체적인 데이터와 도표를 통해 충분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넷째 항목에서 언급된 '선거 시기'와 관련해서는, 특히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각각 구분하여 분석한 부분이 전체 논문에서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논문 저자들께서는 '안보-경제 연계'를 설명하기 위해 정부 정책자료와 법률의 제정-개정 과정을 분석하셨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안보 논리와 경제·개발 논리가 정책적 담론과 제도 속에서 어떻게 결합되었는지를 밝히는 데에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실제 경제성장, 주민소득, 기업활동, 투자 및 지역개발의 성과를 보여주는 경제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문에서 말하는 '경제'는 실질적 경제 변화라기보다 경제-개발에 관한 정책적 요구와 담론에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자께서 경제를 안보와 동등한 위상을 지니는 구성 요소로 논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정책을 중심으로 서술을 전개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실재를 충분히 보여주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4. 발제자께서 지적하신 구성주의에 대한 내용은 개인의 견해와 기본적으로 일치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남북 문제는 처음 등장한 시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계 양측의 두 정치적 주체만을 고려하고, 더 높은 차원의 동북아 지역 질서와 국제 질서를 배제한 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냉전의 종식으로 냉전의 최전선이었던 남북 대치 상황이 어느 정도 완화되기는 했지만, 미국이 북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는 무렵마다 남북 문제는 결코 회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는 발제자께서 지적하신 다음과 같은 견해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즉 '이 논문의 구성주의는 한반도 접경이 지닌 억압적이고 절대적인 물질성을 간과할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논의해 보고 싶은 부분은 다음과 같은 문장이 지나치게 단정적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담론이 아무리 경제적 교류와 유동성을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지뢰와 철책과 같은 물질적 실체가 존재하는 한, 그 공간은 절대 다공적일 수 없다.' 21 세기 초에는 개성공업단지와 금강산 관광지구 개발이라는 실제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성공업단지의 경우, 단지 내 자본-기술-노동력-자재의 이동과 유통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매우 제한된 지역 내에서는 해당 공간을 다공적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 추후 제4장 발제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현재 남북 관계의 핵심적인 난점은 북조선이 남한과의 소통과 교류를 가능하게 했던 모든 경로를 차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성공업단지나 금강산 관광지구와 같은 공동 개발을 재개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반도 내부의 상황만을 놓고 보더라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진보와 보수 세력이 교대로 집권하고 민간 차원의 우익 세력까지 개입하는 등, 한국 정치의 현실 자체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남북 관계의 긴장을 완화하고 대남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집권 세력이 교체될 때마다 대북정책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북한 내부에서 한국이 일본과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독자적으로 향후 방향을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으로 동아시아라는 지정학적 스케일에서 바라본다면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어느 국가도 남북한이 협력하여 정세가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반도 통일 세력이 형성되는 상황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